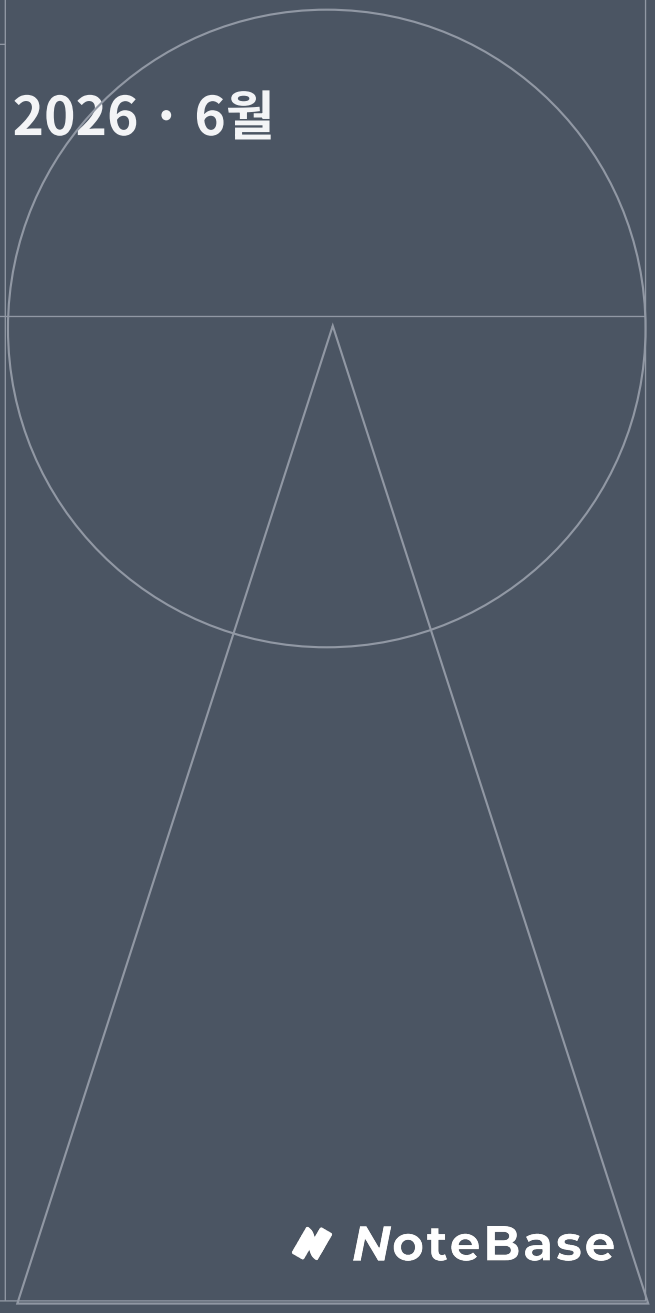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26 · 6월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26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26 · 6월**

**문 1. <보기>의 사례를 연구 윤리 측면에서 평가한 진술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은 정부의 의뢰를 받아 한부모 가정 학생들의 학교 적응 실태를 연구하기 위해 A지역의 학교를 방문하였다. 갑은 연구 주제와 목적을 설명한 후,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한부모 가정 학생 20명의 학교 재적 현황과 학교 성적, 상담 일지, 징계 기록, 가족 현황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그 후 갑은 대상자들의 이름과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 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금전적 대가를 받고 A지역 학원 연합에도 제출하였다.

① 개인적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자료를 선발하였다.
②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③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④ 수집한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학교장의 동의는 **연구 대상자인 학생들의 동의**를 대신하지 못한다. 갑은 학교장의 동의만 얻어 학생들의 자료를 수집·분석했으므로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갑이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골랐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학교 적응 실태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 분석했으므로, **자료 선별 과정의 편향은 확인할 수 없다**. 학원 연합에 금전적 대가를 받고 보고서를 제공한 행위와 자료를 편향되게 선별한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② X: 익명성 보장은 연구 결과를 통해 대상자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갑은 **대상자의 이름과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므로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보고서에서는 이름을 가리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O: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주제와 목적, 자료 이용 등을 알리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갑이 동의를 받은 사람은 학교장이며, 연구 대상자인 학생들의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다. **학교장의 동의와 연구 대상자의 동의는 별개**이므로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평가가 타당하다.

④ X: 갑은 정부가 의뢰한 학교 적응 실태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금전적 대가를 받고 학원 연합에도 제출하였다. 이는 **자료를 본래 연구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이다. 수집한 자료는 대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은 연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NoteBase

**문 2. <보기>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양적 연구 방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연구자 갑(甲)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분노 조절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갑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수강할수록 분노 조절 능력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40명을 선발하였다. 이후 갑은 선발한 학생을 A집단과 B집단으로 각각 20명씩 나누어 4주 동안 A집단에게는 평상시와 같이 생활하게 하고 B집단에게는 1주일에 한 번씩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하였다.

①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②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되는 것을 막는 데 불리하다.

③ 사회·문화 현상의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고 현상을 예측하는 데 불리하다.

④ 사회·문화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양적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을 **수량화하여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 행동의 주관적 의미와 복잡한 맥락을 충분히 담지 못해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양적 연구는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일반적인 법칙을 찾으려는 연구 방법이다. 사례에서 갑은 프로그램 수강과 분노 조절 능력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A집단과 수강하는 B집단을 비교하려 한다. 이는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실험법에 해당한다.

① X: 직관적 통찰을 통해 행위자의 내면과 주관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는 것은 **질적 연구**의 특징이다. 양적 연구는 직관적 이해보다 관찰·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한 가설 검증을 중시한다.

② X: 양적 연구는 표준화된 측정 절차와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중시하므로, 질적 연구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개입을 막는 데 유리하다**. 다만 양적 연구라고 해서 가치 개입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③ X: 양적 연구는 여러 사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을 찾아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고 현상을 예측하는 데 유리하다**. 개별 행위자의 고유한 의미와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

④ O: 양적 연구는 복잡한 사회·문화 현상을 측정 가능한 변수와 수치로 나타낸다. 이때 인간 행동에 담긴 의미나 상황적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NoteBase

**문 3. <보기>의 사회 조직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A조직은 특정한 목표 달성과 과업 수행을 위해 의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사회 집단이다.
B조직은 A조직 내에 존재하면서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회 집단이다.

① A조직과 B조직은 같은 목표를 가진다.

② A조직으로는 기업, B조직으로는 회사 내 동호회가 있다.

③ B조직과 달리 A조직은 친밀한 인간 관계를 더 중시한다.

④ B조직에 속하는 사람들은 A조직에서와 다른 지위나 역할을 가질 수 없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기업은 특정한 목표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공식 조직**이다. 회사 내 동호회는 구성원들이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만든 **비공식 조직**이다.

**선지별 해설**

A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성된 공식 조직이다. B는 공식 조직 안에서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비공식 조직이다.

① X: A는 조직의 공식적 목표 달성과 과업 수행을, B는 구성원의 친목 도모나 공통 관심사 충족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B가 A 안에 존재하더라도 **두 조직의 목표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② O: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등의 목표를 위해 업무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한 공식 조직이다. 회사 내 동호회는 같은 회사의 구성원들이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형성**한 비공식 조직이다.

③ X: 친밀한 인간관계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것은 A가 아니라 **비공식 조직인 B**이다. A는 공식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업무 수행과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더 중시한다.

④ X: 같은 사람이라도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에서 **서로 다른 지위와 역할**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인 사람이 회사 내 동호회에서는 회장을 맡아 활동을 이끌 수 있다.

NoteBase

**문 4.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회 조직 운영 원리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조직 내에서 각자가 맡은 직책상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비인격적으로 수행한다. 구성원들의 직책은 전문화된 분업화의 원칙에 따라 상부로부터 임명되며, 각자의 직책은 명확하게 업무 분담이 이루어진다. 또한 업무 수행은 반드시 조직의 공식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라 행해진다.

① 명령계통에 따른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②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지 않는다.
③ 조직 구성원의 재량권 보장을 중시한다.
④ 새로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쉽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전문화된 업무 분담과 공식적인 규정·절차를 강조하는 운영 원리는 **관료제**이다. 관료제는 직책의 위계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므로, 상급자의 지시가 아래로 전달되는 **하향식 의사 결정**이 지배적이다.

**선지별 해설**

<보기>는 관료제의 운영 원리를 설명한다. 관료제는 전문화된 분업과 위계질서,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를 바탕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업무를 비인격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친분이나 감정보다 직책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뜻이다.

① O: 관료제에서는 직책이 상하 위계로 배열되고, 상급자가 하급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따라서 **명령계통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의사를 결정하고 지시하는 방식이 지배적이다.

② X: 관료제는 근속 연수와 경력 등 **연공 서열을 보상과 승진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연공 서열보다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조하는 것은 탈관료제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③ X: 관료제는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식적인 규정과 절차를 중시한다. 구성원이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정해진 방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므로, **개인의 재량권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구성원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강조하는 것은 탈관료제의 특징이다.

④ X: 관료제에서는 기존 규정과 절차를 따르고 여러 위계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쉽기보다 **조직 운영이 경직되기 쉽다**.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은 탈관료제가 지향하는 특징이다.

NoteBase

**문 5. <보기>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원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갑(甲)은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했지만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였다. 이후 갑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을(乙)과 비교해 자신의 연봉과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고 판단하였고 가족과 상의한 끝에 을의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기로 결심하였다.
· 병(丙)은 작년에 의과 대학 진학을 희망했으나 합격하지 못하고 약학 대학에 진학하였다. 이후 병은 학업을 이어가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고 결국 의과 대학 진학 의지를 확고히 하여 재수를 결심하였다.

① 준거 집단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② 구성원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③ 공식적 통제 수단의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④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갑과 병은 각각 대기업과 의과 대학을 자신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인 **준거 집단**으로 삼았다. 현재 속한 중소기업·약학 대학과 지향하는 집단이 달라 이직과 재수를 결심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소속 집단은 개인이 실제로 속해 있는 집단이고, 준거 집단은 자신의 가치 판단이나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다. 준거 집단은 자신이 속한 집단일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은 집단일 수도 있다.

① X: 갑에게는 대기업이, 병에게는 의과 대학이 준거 집단으로 존재한다. 준거 집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 속하지 않은 집단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② X: 사례에는 직장이나 대학의 다른 구성원과 의견·이해관계가 충돌했다는 내용이 없다. 두 사람이 변화를 결심한 이유는 구성원 간 갈등이 아니라 **현재의 소속과 지향하는 집단의 차이**이다.

③ X: 공식적 통제는 법이나 조직의 명문화된 규칙 등을 통해 구성원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사례에는 그러한 통제 수단의 부작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갑과 병은 **자신이 바라는 집단에 속하기 위해** 이직과 재수를 준비하는 것이다.

④ O: 갑의 소속 집단은 현재 근무하는 중소기업이고, 준거 집단은 을이 근무하는 대기업이다. 병의 소속 집단은 현재 다니는 약학 대학이고, 준거 집단은 진학을 희망하는 의과 대학이다. 두 사람 모두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하지 않아** 현재의 소속을 바꾸려 한다.

NoteBase

**문 6.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좁은 의미로는 대중 매체에 의해 제공되고 형성된 문화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대중 사회가 등장하면서 나타난 문화를 의미한다. ㉠ 이러한 문화는 근대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등장하였다.

① 문화의 획일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② 소수 엘리트 계층에 의해 독점적으로 향유되었다.

③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문화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④ 대중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고 삶의 활력을 제공하였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대중문화는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는 문화가 아니라 **다수의 대중이 폭넓게 누리는 문화**이다. 대중 매체의 발달로 문화가 널리 보급되면서 문화 향유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선지별 해설**

㉠은 대중문화이다. 대중 매체를 통해 형성·보급되고 대중이 널리 향유하는 문화로, 근대 대중 사회의 등장과 함께 발달하였다.

① O: 대중 매체가 비슷한 문화 상품을 대량으로 보급하면 많은 사람이 같은 콘텐츠와 유행을 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취향과 생활 양식이 비슷해지는 **문화의 획일화**가 나타날 수 있다.

② X: 대중문화는 **다수의 대중이 향유하는 문화**이다. 소수 엘리트 계층이 독점적으로 누리는 문화라는 설명은 대중문화의 개방성과 대중성을 거꾸로 서술한 것이다.

③ O: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가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확대되었다. 이처럼 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를 넓힌 것**이 문화 민주화에 기여한 측면이다. 이는 모든 사람의 실제 문화생활 수준이 완전히 같아졌다는 뜻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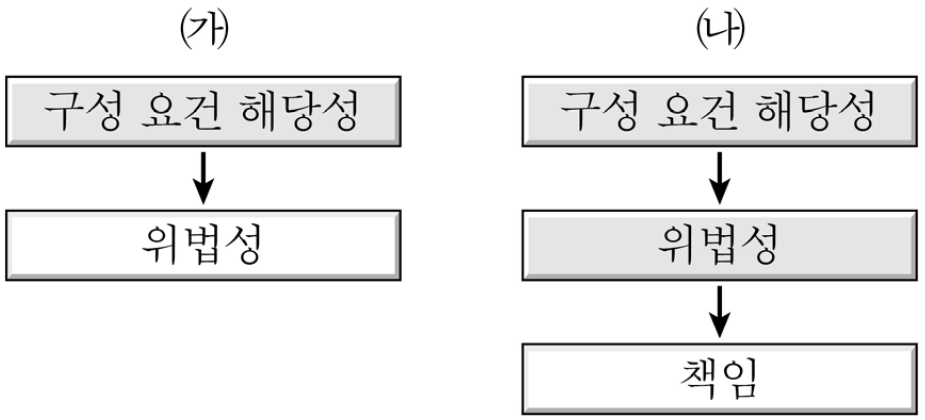
④ O: 대중문화는 음악·영화·방송 등의 문화 콘텐츠를 폭넓게 제공하여 대중의 여가 생활을 풍부하게 한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즐거움과 휴식을 얻고 일상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

NoteBase

**문 7. <보기>는 갑(甲, 19세)의 행위를 범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갑의 행위가 (가)에 해당할 경우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② 갑이 현행범을 체포한 행위는 (가)에 해당한다.

③ 갑이 심신 미약인 상태에서 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친 행위는 (나)에 해당한다.

④ (가)와 달리 (나)에 해당할 경우 갑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현행범인을 적법하게 체포하는 것은 법령이 허용한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도식의 (가)는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 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도식에서 회색은 요건 충족, 흰색은 요건 불충족을 뜻한다. (가)는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는 '위법성 조각'의 경우이고, (나)는 구성 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는 책임이 없는 '책임 조각'의 경우이다.

① X: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가)는 **위법성이 조각된 경우**이므로 이러한 평가를 할 수 없다.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책임이 없는 (나)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O: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갑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였다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는 (가)에 해당한다.

③ X: 심신 미약은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로,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신 미약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조각되는 (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다. 같은 조 제1항의 심신 상실처럼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④ X: (가)는 위법성이 없고, (나)는 책임이 없어 **두 경우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에 해당할 때에도 그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형벌을 부과하려면 구성 요건 해당성과 위법성뿐 아니라 책임도 인정되어야 한다.

NoteBase

**문 8. <보기>는 국회의 의사 일정을 가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오늘의 의사 일정 | |
|---|---|
| ㉠ 본회의 의사 일정<br>• 27개 ㉡ 법률안 의결<br>• ○○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br>• ㉢ 국군의 해외 파병 동의안 처리 | 위원회 의사 일정<br>• 운영 위원회: ㉣ 교섭 단체 요건 완화 방안 논의<br>• 국방 위원회: △△ 법률안(정부 제출) 심의 |

① ㉠은 정기회뿐만 아니라 임시회에서도 열린다.

② ㉡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국무총리가 공포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③ ㉢을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④ ㉣은 법률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 본회의는 국회의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로, **정기회와 임시회 모두에서** 열린다. 정기회·임시회는 국회가 활동하는 회기의 구분이고, 본회의는 그 회기 중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은 본회의이다. 본회의는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법률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국회의 최종 의사를 결정한다. 헌법 제47조는 국회의 집회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본회의는 **두 회기 모두에서** 열릴 수 있다.

② X: ㉡은 법률안이다. 헌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국무총리가 공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대통령이 이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되며, 재의 요구가 있어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따라서 공포를 해야만 법률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③ X: ㉢은 국군의 해외 파병이다.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한다.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하더라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의사 일정에 파병 동의안 처리가 포함되어 있다.

④ X: ㉣은 교섭단체이다.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정당이나 의원들의 의사를 모으고 의사 일정 등 국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조정하는 의원 집단이다. 법률안을 소관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은 **상임위원회**이다. 국회법 제36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며, 자료의 국방위원회가 정부 제출 법률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그 예이다.

NoteBase

**문 9. <보기 1>에 나타난 갑(甲)의 사회 이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갑은 배가 고픈 나머지 음식을 훔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출소 후 갑은 전과자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다가 길에 쓰러진 노인을 구해주어 노인의 집사로 취직하게 되었다. 이후 성실하게 집사 일을 하면서 노인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노인의 재산을 물려받아 도시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다.

<보기 2>
ㄱ. 수직적 이동
ㄴ. 개인적 이동
ㄷ. 구조적 이동
ㄹ. 세대 내 이동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가난했던 갑이 부자가 된 것은 **개인의 활동과 기회에 따른 계층 상승**이며, 이 변화는 **갑 자신의 생애 안에서** 일어났다. 사회 구조가 바뀌어 여러 사람의 지위가 함께 변한 사례는 아니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수직적 이동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이동이다. 갑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처지에서 도시의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으므로, 경제적 계층이 높아지는 **상승 이동**을 하였다.

ㄴ. O: 개인적 이동은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우연한 기회 등 개인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위가 변하는 것이다. 갑은 노인을 구한 일을 계기로 집사가 되었고, 성실하게 일하여 신임을 얻은 뒤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처럼 **개인적 요인으로 지위가 변했으므로** 개인적 이동에 해당한다.

ㄷ. X: 구조적 이동은 산업 구조나 사회 제도 등 **사회 구조의 변화로** 여러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변하는 것이다. 갑의 계층 상승은 사회 구조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노인과의 만남, 성실한 근무, 재산 상속 등 개인적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개인적 이동으로 보아야 한다.

ㄹ. O: 세대 내 이동은 **한 개인의 생애 안에서** 사회적 지위가 변하는 것이다. 사례는 부모와 자녀의 지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갑 자신의 과거와 이후 지위를 비교하므로 세대 내 이동에 해당한다.

갑의 사회 이동에 해당하는 것은 ㄱ · ㄴ · ㄹ이며, 이는 ③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0. <보기>는 어떤 법의 일부이다. 이 법을 위반한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제1조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갑(甲)은 근로 시간이 하루 8시간인 직원 A(23세)에게 1시간의 휴식 시간을 주었다.

② 을(乙)은 B(19세)와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③ 병(丙)은 C(17세)를 고용하면서 C의 아버지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정(丁)은 미리 동의를 얻어 직원 D(33세)에게 1주일 동안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시켰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하며, 부모가 대신 체결할 수 없다. 따라서 17세 C가 아니라 C의 아버지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선지별 해설**

<보기>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의 목적 조항이다. 아래 O/X는 각 사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낸다.

① X: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23세 A에게 1시간의 휴식 시간을 준 것은 이 기준에 맞으므로, 제시된 내용은 위반 사례가 아니다.

② X: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을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한다. 19세 B에게 매월 10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정기 지급 원칙에 맞으므로, 위반 사례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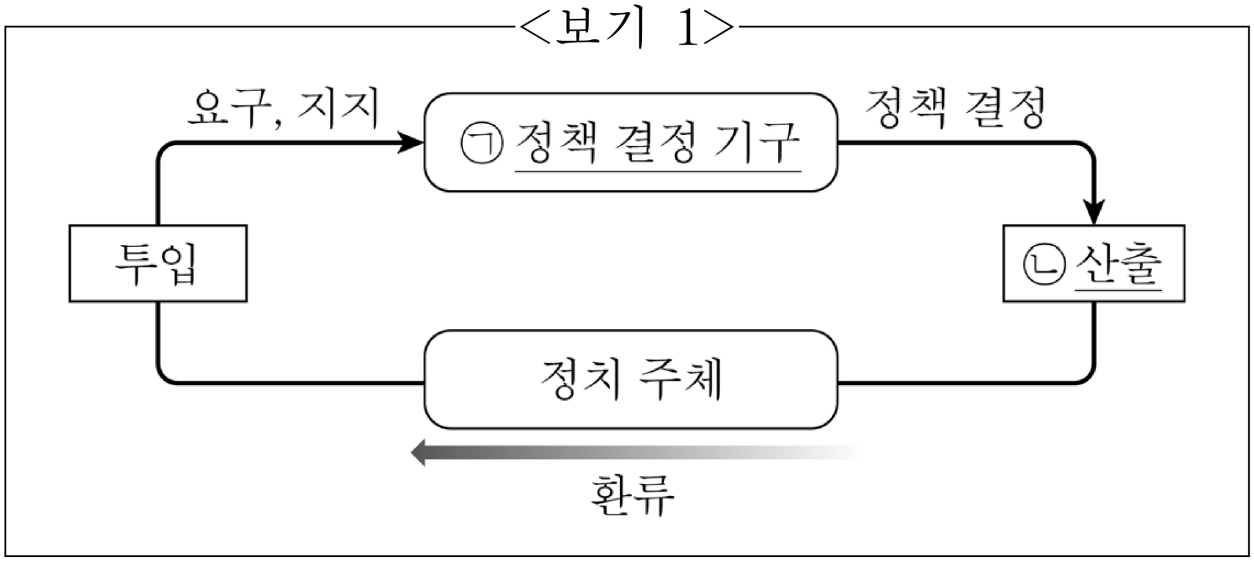
③ O: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병은 17세 C의 아버지가 아니라 **C 본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66조에 따라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는 것과, 부모가 계약 체결을 대신하는 것은 다르다.

④ X: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성인 근로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33세 D의 동의를 미리 얻어 1주일에 12시간 연장 근로를 하게 한 것은 이 범위에 해당하므로, 제시된 내용은 위반 사례가 아니다.

NoteBase

**문 11. <보기 1>의 정치 체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보기 2>

ㄱ. ㉠은 국가 기관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함한다.

ㄴ. ㉡은 정치 과정 중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는 과정이다.

ㄷ. 정당, 이익 집단은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은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ㄹ. 정치 과정이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둘러싼 요구가 정책 결정 기구에 투입되어 정책으로 나타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사회 구성원의 요구와 지지는 **정책 결정 기구**에 투입되어 법률·정책 등의 산출로 이어진다. 정책 결정 기구에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포함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그림의 ㉠은 사회의 요구와 지지를 받아 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정책 결정 기구이다. 여기에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포함된다.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정책을 수립·집행하며,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ㄴ. X: 그림에서 ㉡은 정책 결정 기구의 오른쪽에 있는 산출이다. 산출은 요구를 처리한 결과가 법률이나 정책 등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다.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어 정책 결정 기구로 전달되는 것은 **산출이 아니라 투입**이다.

ㄷ. X: 정당과 이익 집단뿐 아니라 **개인도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은 투표, 청원, 의견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고 정책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현할 수 있다.

ㄹ. O: 정치 과정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둘러싼 요구가 정책 결정 기구에 투입되고, 처리되어 정책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림은 **투입 → 정책 결정 → 산출**의 흐름을 보여 준다. 산출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반응이 새로운 요구나 지지로 이어지는 환류를 통해 이 과정이 반복된다.

옳은 보기는 ㄱ, ㄹ이며, 이를 묶은 선택지는 ②이다.

NoteBase

**문 12. <보기>의 대화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교사: 혼인의 성립 및 유효 요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학생 1: 양 당사자의 ㉠혼인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또 해당 혼인이 ㉡중혼(重婚)이 아니어야 합니다.
학생 2: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해야 하며 ㉣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사: 네, 모두 맞게 대답했어요.

① ㉠과 ㉡은 혼인의 형식적 요건이다.

② ㉢은 19세이며, 19세인 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을 하면 배우자 간의 상속권이 인정된다.

④ ㉢인 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한 경우에도 민법상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뒤 **혼인 신고**를 하면 법률상 부부가 된다. 이에 따라 한쪽이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에게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의 혼인 의사 합치와 ㉡의 중혼이 아닐 것은 모두 **혼인의 실질적 요건**이다. 실질적 요건은 당사자의 의사나 신분 등 혼인 자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고, 형식적 요건은 ㉣의 혼인 신고이다. 민법 제810조는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중혼을 금지하고,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혼인을 무효로 정한다.

② X: ㉢의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이다(민법 제807조). 한편 성년이 되는 연령은 19세이므로, 미혼인 18세 미성년자가 혼인하려면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조, 제808조 제1항). 19세가 된 사람은 이미 성년이므로 미성년자의 혼인에 요구되는 부모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혼인 가능 연령과 성년 연령을 구분해야 한다.

③ O: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의 혼인 신고를 하면 **법률혼**이 성립한다(민법 제812조 제1항). 법률상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하면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된다(제1003조 제1항). 혼인 신고 없이 부부로 생활하는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는 이러한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X: ㉢인 18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면 **성년의제**가 적용되어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민법 제826조의2). 따라서 혼인 후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으며,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때 미성년자에게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NoteBase

**문 13. <보기>의 우리나라 국가기관 A~F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인 A는 의장인 B가 불참한 가운데 부의장인 C의 주재로 긴급한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B는 D의 동의를 얻어 E의 장(長)과 F의 장(長)을 임명하였다.
• E는 B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등을 담당한다.
• F는 국가의 사법 작용 중 헌법 재판을 담당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있다.

① A는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② F는 B와 C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다.
③ D와 E는 F와 달리 B가 결정하는 정책과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④ B가 C를 임명하고자 할 때 D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B는 대통령, C는 국무총리, D는 국회이다. 헌법상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인 A는 국무회의이며, 의장 B는 대통령, 부의장 C는 국무총리이다(헌법 제88조). 대통령 소속으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E는 감사원이고,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F는 헌법재판소이다.
대통령이 감사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 동의를 얻어야 하는 D는 국회이다(헌법 제98조 제2항, 제111조 제4항).

① X: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는 기관은 A인 국무회의가 아니라 **E인 감사원**이다(헌법 제97조).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결산에 관한 심의와 감사원의 결산검사는 구별된다.

② X: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기관은 D인 국회**이다(헌법 제65조 제1항). F인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소추에 따라 탄핵심판을 하여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③ X: D인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기관**이므로, 대통령의 정책과 행정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볼 수 없다(헌법 제40조). E인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이지만, 감사 업무는 직무상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따라서 국회와 감사원을 모두 대통령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묶은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O: B인 대통령이 C인 국무총리를 임명하려면 **D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86조 제1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지만,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는 없다.

NoteBase

**문 14. <보기 1>에 대해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A는 헌법에 의한 통치, 즉 헌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민주적 통치 원리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통치하는 원리를 의미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그런데 A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근대의 A와 ㉡현대의 A는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등을 두고서는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인다.

<보기 2>
ㄱ. A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ㄴ. ㉠은 빈부 격차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한다.
ㄷ. ㉡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중요시한다.
ㄹ. ㉠과 달리 ㉡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시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입헌주의는 헌법으로 국가 권력을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원리이다. 현대 입헌주의는 자유권 보장에 더해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도 강조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A는 헌법에 따라 국가 권력을 행사하고 제한하는 입헌주의이다. ㉠은 근대 입헌주의, ㉡은 현대 입헌주의를 가리킨다.

ㄱ. O: 입헌주의는 헌법으로 국가 권력의 행사 범위와 한계를 정해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막는다. 이러한 권력 제한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다.

ㄴ. X: 근대 입헌주의는 국가의 간섭을 줄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빈부 격차와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는 것은 현대 입헌주의**이다.

ㄷ. O: 현대 입헌주의는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빈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에 생활 보장을 요구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중시하고, 사회 보장 등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ㄹ. X: 현대 입헌주의도 근대 입헌주의가 강조한 개인의 자유 보장을 중요시한다. 자유권 보장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유권 보장에 사회권 보장을 더한 것**이다.

옳은 보기는 ㄱ, ㄷ이며, 이는 ②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나라 헌법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삼권 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권력 분립 제도는 아니다. 즉,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①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②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가진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권력 분립과 견제**를 보여 준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을 견제하는 권한이므로,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이 문항에서는 각 제도가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① X: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는 내용 자체는 사실이다.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하여 이송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제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이를 의원 내각제 요소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O: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한다. 정부가 법률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안을 제출하여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을 중시하는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③ O: 헌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는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이처럼 **행정부 구성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연계를 보여 주는 의원 내각제 요소이다.

④ O: 헌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는 국회가 행정부 구성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수단이므로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해임건의가 의결되었다고 곧바로 해임되는 것은 아니므로, 내각의 사퇴를 강제하는 의원 내각제의 내각 불신임과는 구별된다.

NoteBase

**문 16. <보기>는 A국의 연도별 경제 지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기준 연도는 2025년이며, A국은 X재만을 생산한다.)**

<보기>

| 구분 \ 연도 | 2025 | 2026 |
|---|---|---|
| X재 생산량 | 100단위 | 120단위 |
| X재 가격 | 10달러 | 15달러 |
| 명목 GDP | 1,000달러 | 1,800달러 |

① 2026년의 실질 GDP는 전년 대비 80% 증가하였다.

② 2026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작다.

③ 2025년과 2026년에 물가가 같다면 2026년의 명목 GDP는 2026년의 실질 GDP와 일치한다.

④ 2026년의 명목 GDP 증가율은 2026년의 물가 상승률과 같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준 연도인 2025년과 2026년의 **물가가 같다면**, 2026년 생산량에 적용하는 가격이 명목 GDP와 실질 GDP에서 같아진다. 따라서 두 GDP는 일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A국은 X재만 생산하므로 명목 GDP는 해당 연도의 X재 가격에 생산량을 곱하고, 실질 GDP는 기준 연도인 2025년의 가격 10달러에 해당 연도 생산량을 곱하여 구한다. 명목 GDP에는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가 함께 반영되지만, 실질 GDP에는 생산량의 변화만 반영된다.

① X: 2025년의 실질 GDP는 10 × 100 = 1,000달러이고, 2026년의 실질 GDP는 10 × 120 = 1,200달러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frac{1,200-1,000}{1,000} \cdot 100 = 20\%$이다. 따라서 실질 GDP 증가율은 **80%가 아니라 20%**이다. 80%는 표의 명목 GDP가 1,000달러에서 1,800달러로 증가한 비율이다.

② X: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으로, 기준 연도 대비 물가 수준을 나타낸다. 2026년에는 $\frac{1,800}{1,200} \cdot 100 = 150$이므로 **100보다 크다**. 이는 X재 가격이 기준 연도의 10달러에서 15달러로 상승한 것과 일치한다.

③ O: 이 선지는 표의 실제 가격 변화와 달리 **두 연도의 물가가 같다는 조건**을 가정한다. X재만 생산하므로 이 조건에서는 2026년의 X재 가격도 기준 연도와 같은 10달러이다. 따라서 2026년의 명목 GDP와 실질 GDP는 모두 10 × 120 = 1,200달러로 일치한다.

④ X: 명목 GDP 증가율은 $\frac{1,800-1,000}{1,000} \cdot 100 = 80\%$이다. 반면 X재만 생산하는 A국의 물가 상승률은 X재 가격 상승률인 $\frac{15-10}{10} \cdot 100 = 50\%$이다. 명목 GDP는 **물가 상승뿐 아니라 생산량 증가도 반영**하므로, 이 자료에서 두 증가율은 같지 않다.

NoteBase

**문 17. <보기 1>은 개당 가격이 6만 원인 X재를 5개까지 소비할 때 소비자 갑(甲)이 얻는 총편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 소비량(개) | 1 | 2 | 3 | 4 | 5 |
|---|---|---|---|---|---|
| 총편익(만 원) | 10 | 18 | 25 | 30 | 34 |

<보기 2>

ㄱ. 순편익이 가장 큰 소비량은 3개이다.

ㄴ.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순편익이 증가한다.

ㄷ. 소비 지출액이 가장 클 때 순편익이 최대가 된다.

ㄹ. 2개를 소비할 때와 4개를 소비할 때의 순편익은 같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순편익은 **총편익에서 소비 지출액을 뺀 금액**이다. 3개를 소비할 때 7만 원으로 가장 크고, 2개와 4개를 소비할 때는 각각 6만 원으로 같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순편익은 소비로 얻는 총편익에서 실제로 지불한 소비 지출액을 뺀 것이다. 개당 가격이 6만 원이므로 소비 지출액은 6만 원 × 소비량이다. <보기 1>에서 소비량이 1~5개일 때 총편익은 차례로 10만 원, 18만 원, 25만 원, 30만 원, 34만 원이고, 소비 지출액은 6만 원, 12만 원, 18만 원, 24만 원, 30만 원이다. 따라서 순편익은 차례로 4만 원, 6만 원, 7만 원, 6만 원, 4만 원이다.

ㄱ. O: 순편익은 **3개를 소비할 때 7만 원으로 최대**이다. 이때 총편익 25만 원에서 소비 지출액 18만 원을 뺀다.

ㄴ. X: 순편익은 1개에서 3개까지는 증가하지만, **3개를 넘어서면 감소**한다. 총편익이 계속 증가하더라도 소비 지출액을 뺀 순편익까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ㄷ. X: 제시된 범위에서 소비 지출액은 5개를 소비할 때 30만 원으로 가장 크지만, 이때 순편익은 4만 원이다. **순편익이 최대인 소비량은 3개**이며, 이때 소비 지출액은 18만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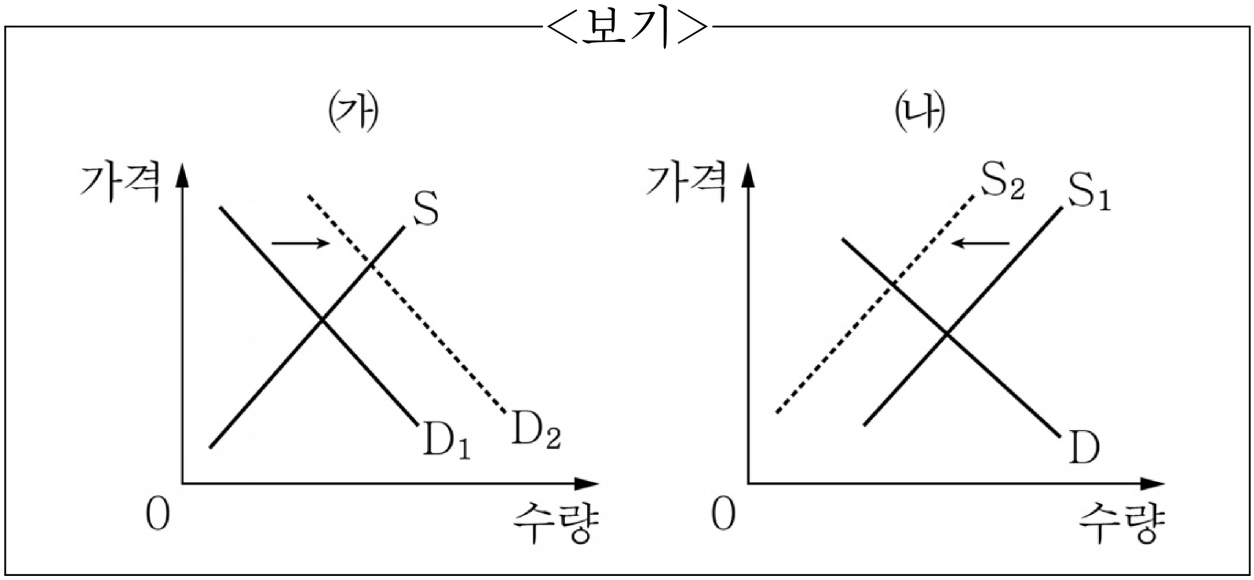
ㄹ. O: 2개를 소비하면 순편익은 18만 원 − 12만 원 = 6만 원이고, 4개를 소비하면 30만 원 − 24만 원 = 6만 원이다. 두 경우의 총편익과 소비 지출액은 다르지만 **순편익은 같다**.

옳은 보기는 ㄱ, ㄹ이므로 ②의 조합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8. <보기>의 (가)와 (나)는 각각 X재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X재는 정상재이다.)**

<보기>




① (가)의 요인으로 대체재 가격의 하락이 있다.

② (나)의 요인으로 소비자 소득의 감소가 있다.

③ 보완재 가격의 상승은 (가)의 요인이 된다.

④ 생산자의 X재 가격 상승 예상은 (나)의 요인이 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나)는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 **공급 감소**이다. 생산자가 X재의 미래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 나중에 더 높은 가격으로 팔기 위해 현재 판매를 미루므로 **현재 공급이 감소**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두 그래프의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수량이다. (가)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같은 가격에서 수요량이 늘어난 '수요 증가'이고, (나)는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같은 가격에서 공급량이 줄어든 '공급 감소'이다.

① X: 대체재는 서로 대신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이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대체재를 더 구입하므로 X재의 수요는 감소한다. 이는 (가)와 반대 방향의 변화이다. (가)의 요인이 되려면 **대체재 가격이 상승**해야 한다.

② X: X재는 정상재이므로 소비자 소득이 감소하면 X재의 수요가 감소하여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소득 감소는 **수요 감소 요인**이며, (나)에 나타난 공급 감소의 요인이 아니다.

③ X: 보완재는 함께 소비할 때 효용을 얻는 재화이다.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재의 소비가 줄면서 함께 쓰는 X재의 수요도 감소한다. (가)의 수요 증가를 일으키는 요인은 보완재 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보완재 가격의 하락**이다.

④ O: 생산자가 앞으로 X재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 현재 판매하기보다 나중에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려 한다. 이에 따라 **현재의 공급이 감소**하여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므로 (나)의 요인이 된다.

NoteBase

**문 19.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높이면 시중 은행의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②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면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하락한다.

③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대출을 확대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④ 중앙은행이 이자율 인상 또는 통화량 감소를 통해 총수요를 줄이는 통화 정책을 긴축 통화 정책이라고 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지급 준비율을 높이면 은행이 예금 중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비율이 커져 **대출 가능 금액과 통화량이 감소**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통화 공급 감소로 이자율은 상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지급 준비율은 은행이 예금 중 지급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비율이다. 이를 높이면 같은 예금액에 대해 확보해야 할 지급 준비금이 늘어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대출을 통한 예금 창출이 위축되므로 통화량은 감소하고,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따라서 선지의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부분을 반대로 고쳐야 한다.

② O: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면 매입 대금이 시중에 지급되어 은행의 지급 준비금과 대출 여력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하며, **통화 수요가 일정할 때 통화 공급이 늘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이는 경기를 부양하는 확대 통화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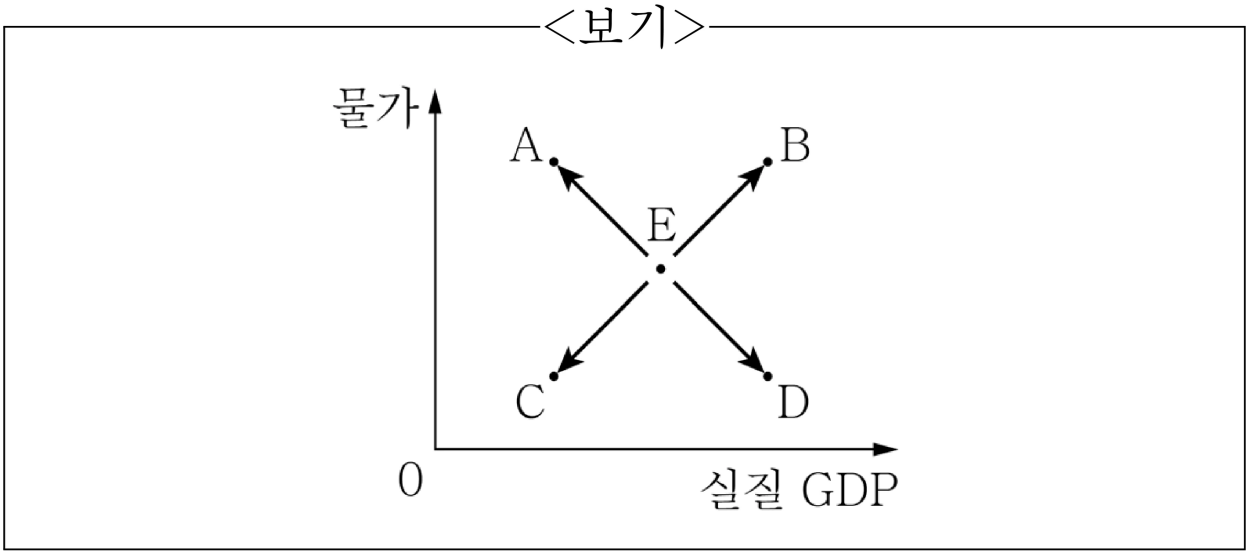
③ O: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대출을 확대하면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공급받는 자금이 늘어난다. 은행은 늘어난 지급 준비금을 바탕으로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예금이 창출되어 통화량이 증가한다.

④ O: 긴축 통화 정책은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거나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이자율을 높이거나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이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차입 비용이 커져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총수요가 감소한다.

NoteBase

**문 20. <보기>는 갑(甲)국의 국민 경제 균형점 E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민간 소비가 감소하는 것은 A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②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율 인상은 B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③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는 것은 C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④ 수입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는 것은 D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낮아져 **총공급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물가는 하락하고 실질 GDP는 증가하므로 균형점이 E에서 D로 이동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그림의 세로축은 물가, 가로축은 실질 GDP이다. E를 기준으로 A는 물가 상승·실질 GDP 감소, B는 둘 다 증가, C는 둘 다 감소, D는 물가 하락·실질 GDP 증가를 나타낸다.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각 요인이 어느 곡선을 이동시키는지 살펴본다.

① X: 민간 소비는 총수요의 구성 요소이므로 소비가 감소하면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물가와 실질 GDP가 모두 하락하므로 이동 방향은 **A가 아니라 C**이다. A와 같은 변화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총공급이 감소할 때 나타난다.

② X: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이 예금 중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준비금의 비율이 높아진다.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 통화량이 감소하고,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어 총수요가 감소한다. 따라서 물가와 실질 GDP가 모두 하락하는 **C 방향**의 요인이다. B는 총수요가 증가할 때의 변화이다.

③ X: 정부 지출 증가는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노동 생산성 상승은 총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두 변화는 모두 **실질 GDP를 증가**시키므로 실질 GDP가 감소하는 C로 이동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 물가는 총수요 증가의 상승 압력과 총공급 증가의 하락 압력이 함께 작용하므로 두 변화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상승·하락하거나 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O: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원자재 구입 비용이 줄고,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면 같은 생산량에 필요한 노동 투입이 줄어 단위당 생산 비용이 낮아진다. 두 요인은 모두 **총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총수요가 일정하면 물가는 하락하고 실질 GDP는 증가하므로 균형점은 E에서 D로 이동한다.

NoteBase